

“추경 처리” vs “국조 먼저”... 여야 또 팽팽

국회 일정 놓고 줄다리기...민주, 조건 없는 일정협의 촉구 한국당·바른미래 '北 어선 입항 사건 조사' 조건으로 제시

6월 임시국회가 정상 궤도에 올랐으나 남은 국회 일정 조정을 놓고 여야 간 지리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 개최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지속되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합의 이후 본회의 일정 조정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조건 없는 일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개최를 완전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어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3일 국회의 완전 정상화가 이

뤄지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다. 한국당의 비협조로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당이 오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하는 등 예결위 정상 가동이 임박함에 따라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모습이다.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신속한 추경안 통과 및 집행에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추경예산이 신

속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상임위에서 다룰 문제며 국정조사까지는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3당과의 갈등은 누그러드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방침을 고수하며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의 자격 개정을 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만 열리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또

국회 당연직 특위인 윤리위가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구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당이 5·18 관련법 통과,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 등에 대한 약속이 있으며 국정조사에 공조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내비친 것에 한국당이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사안은 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도 관여해 운영, 정보위, 외교통일위까지 걸쳐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정개특위 위원장 맡기로 가닥

오늘 의총서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법특위)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철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정개특위를 해야 된다는 방향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와의 협상에서 “정개특위와 사법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고,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즉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사법특위 위원장을 나눠 갖고, 두 특위 중 어떤 특위의 위원장을 선택할지는 원내 1당인 민주당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사법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정수사관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법안을 다룬다. 이들 법안은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나, 사법특위나 선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자,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이어온 여야 4당 공조의 균열 가능성도 제기됐다.

따라서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한 것은 ‘야 3당과의 공조체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경제법안,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야 3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선택했다고 해서 사법개혁 의지가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개특위를 선택했다고 선거법은 살리고, 사법 개혁은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오히려 사법개혁 운영에 있어 여야 4당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5·18,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시 평화당 “北 목선 국조 참여”

민주당이 북한 어선 입항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참여 조건으로 내세워 주목된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3일 MBC 라디오에 출연, “평화당은 5·18 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특별법의 통과,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하면 (국정조사에) 동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북한 어선 사건 국정조사는 평화당이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라며 “만약 한국당이 ‘3대 조건’을 보장하고 행동으로 옮겨 평화당이 동조하면 국정조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에서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면서 “유성엽 원내대표가 말하기를 나 원내대표가 그런 것(국정조사 협조 요구)에 대해서 전화를 했고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하니 ‘여순사건특별법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당에서 평화당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당은 여순사건에 대해 군의 항명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인식이 커 국회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국회 365일 일해야...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민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상시국회체제 위한 신사업정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년 365일 일하는 ‘상시국회 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으

로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공존하는 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공존의 길 등 세가지 ‘공존의 길’을 제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로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공존하는 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공존의 길 등 세가지 ‘공존의 길’을 제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北 목선 사건’ 한목소리 질타

국방위 회의...한국당, 축소·은폐 의혹 맹공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방부 현안보고가 이뤄진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북 경제작전 실패와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맹공을 퍼부었다.

경제작전 실패를 인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국방부를 적극 방어하기 보다는 군 당국의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군의 초기 대응을 보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떠올랐다”며 “경제작전에 실패했고, 공보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건 하루 만에 당당하게 나와서 잘못을 인정하면 될 일을 전 국민 불안을 증폭시킨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합참이 무시에 가까운 무 대응으로 의혹을 증폭했다”며 “왜 하필 오늘 오후 1시에 조사 결과를 발표해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빌미를 제공했나. 문제 해결 능력이 0점이었다. 군이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

정조사까지 가지 않고 국방위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의사진행방향을 통해 “국방위 전체회의의 날짜가 먼저 잡혔는데 불과 1시간 전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합동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며 “대통령이나 적어도 국무총리가 사과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종로 의원은 “적을 적이라 얘기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얘기 못하는 국방부의 입장이 안보의 현주소”라며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난맥상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개탄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상 탈북 루트를 공개했다”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간첩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중대 의원은 “안보 실패의 가능성을 보여준 데 대한 책임을 묻고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교훈이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초 좋음.
- 토지** ▶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 함평군 월야면 월거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45%) 18억7백8십만원
- 의료시설**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70%) 10억1천7백4십만원
- 공장** ▶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공장** ▶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45%) 6억6천6백8십만원
- 창고** ▶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5억8백7십만원
- 근린주택** ▶ 목포시 옥암동 토지 : 407.8㎡(123.4평) 건물 : 716.43㎡(216.7평) 지하1층지상2층
감정가 : 7억6백5십2만원 최저가 : (70%) 5억8백7십만원
- 숙박시설** ▶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45%) 10억9천5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